

목표관리제

대응을 위한 기업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방안

고순현 |

(주)에코프론티어 녹색경영사업본부 본부장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환경부 환경성적표지 및 탄소성적표지 인증심사원,

매경 교육센터 탄소경영 / 녹색마케팅 전략 전문가 과정 강사, 지식경제부, 한국수자원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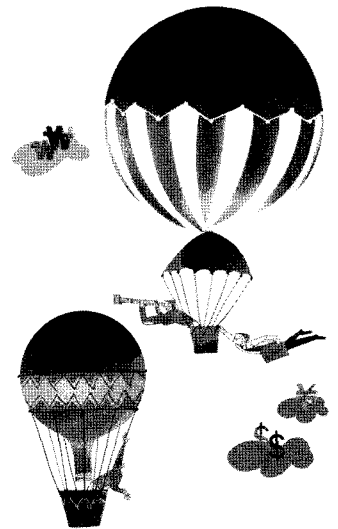
르노삼성자동차, LG전자, 대림산업 등 정부 및 다수기업 컨설팅 및 연구 수행

tel. 02-3153-7760 | shko@ecofrontier.com

2010년 4월 녹색성장기본법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에도 기후변화를 대하는 정부와 산업계간에는 많은 입장 차이가 있었다. 정부 입장에서는 범국가적 이슈라는 확실한 당위성을 바탕으로 개도국 넓게는 선진국을 앞설 정도의 도전과 의지를 가지고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겠다고 천명했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산업계는 비의무국인 한국에서 국가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자발적 행위에 대하여 쉽게 동의하지 못했다. 그 중에서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이다.

목표관리제는 간단히 말해 정부와 합의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제도로서 이행여부에 따라 패널티와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초기 예상과 달리 목표 미달성시 부여되는 패널티가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으나, 1~2천만원에 포기해야되는 회사와 브랜드 이미지 그리고 사회적 비판이 결코 기업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있다.

정부 목표관리제는 처음으로 470여개 관리업체가 지정, 고시된 이후 발 빠르게 제도 운영을 위한 지침 발간, 국가 온실가스등록시스템 구축,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산업계 또한 녹색성장기본법 통과 직후 제도가 제대로 도입되어 운영될 수 있을까? 라는 태도에 변화가 있어 보인다. 즉 초기 계획 대비 다소 지연되는 부분은 있으나 5월 전 관리업체 대상으로 과거 배출량 정보를 바탕으로 한 명세서가 제출되었고 제3자 검증기관을 통한 검증도 6월에 대부분 마무리 된 것으로 발표되었다. 국가차원에서 진행되는 초대형 사업이었던 만큼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는 다소 비판적인 입장에서 정부의 움직임을 관망하고 의사결정을 미뤘던 기업들이 정부 지침에 따라 사내 산재한 데이터를 취합하여 보고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자원 투입과 시행착오를 겪었으리라 생각된다. '5월과 6월 명세서 제출하는게 지옥이었다', '다시는 못 할 일이다' 등의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지금, 목표관리제 업체 이든 아니든 간에 기업에서의 에너지와 온실가스 관리의 필요성은 좀 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의미에서 계획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 저감은 분명히 기업의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 무역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국내외 할 것 없이 새롭게 도입되는 다양한 탄소, 에너지 규제를 생각하면 단순히 규제대응 차원에서 해석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개인, 기업, 국가 차원에서 온실가스 발생량을 관리하고 저감으로 연결하는데 기본이 되는 관리시스템이다. 2~3년 전만해도 국내 기업은 IPCC 또는 WRI에서 발간된 국제 인벤토리 구축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관리해 왔었다. 그 취지 자체가 자발적이었던 만큼 각 기업의 산업, 업종, 제품 특성에 따라 필요한 요소를 전략적으로 접목해 왔었다. 기업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470여개 관리업체는 1차 관문인 명세서 등록을 무사히 마치고 2차 관문인 9월 감축목표 합의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기업 기준으로 에너지 소비량 350TJ이상, 온실가스 발생량 87,500t CO₂이상(3개년 평균)의 기업들에 대한 관리업체 지정·고시가 다가오고 있다. 관리업체로 지정된 기업은 매년 같은 활동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가 것이다. 기업이 처한 이 상황을 단순한 규제대응 정도로 받아들이는다면 우리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까? 여러 의견이 존재하겠지만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온실가스, 탄소경영도 여느 환경관리와 다를 바 없이 일방적인 투자로 인식되어 정부 정책에 대한 수동적 태도, 담당 업무에 대한 기피현상 그로 인해 기업 내 에너지, 탄소 관리에 대한 무관심으로 마무리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탄소 시장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기업이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관리 정책에서도 전략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업 내외부의 모든 탄소경영 활동에 대한 평가와 투자에 인프라로서 활용이 가능한 효과적인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담부서 중심의 사내 협력체계를 구축하자.

과거부터 국내 기업에서는 환경업무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은 사치라는 이미지가 있었다. 모든 환경 관리 활동이 법규 대응이나 오염물처리와 같은 비 생산적 활동을 인식되던 뿌리 깊은 선입견 탓이었지만, 온실가스 이슈가 본격화된 지금에도 여전히 기업내에서는 주관 부서를 정하지 못하거나, 규제대응 테스크포스팀 정도로 조직적 투자에 망설이고 있는 듯하다. 10년 이상 국내 기업을 상대로 컨설팅을 해 오고 있는 저자 입장에서 온실가스 관리 만큼 기업 내 다양한 업무 자원이 복합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생각된다. 업종이나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을 고려하여 주관부서는 결정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에너지와 온실가스 관리를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결코 연중 행사로 취합되어서는 안되는 규제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이슈이므로 점 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에서 전담부서의 신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온실가스 이슈는 단기적으로는 규제이고 장기적으로 신사업의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신사업 개발 및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도 동시에 구축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략적 활용 가치가 있는 인벤토리를 구축하자.

현재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최우선 용도는 목표관리제 대응일 것이다. 그러나 온실가스 이슈는 규제를 넘어 제품의 마케팅 측면, 기업의 전 공급망 관리, 투자자 관리(IR), 기업 이미지 재고 등 다양한 목적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다양한 탄소경영의 이슈들이 표면적으로는 달라 보일 수 있으나 기업, 사업장, 주요 설비 그리고 제품에 대한 탄소정보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우선 그것의 목적이나 활용처를 광범위하게 고려하여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향후 온실가스 관리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의 관심은 갈수록 높아질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당장의 온실가스 규제에 대응한다는 차원보다는 제품의 마케팅이나 제품 탄소회계 및 성과관리, 협력업체 관리, 온실가스 저감사업 발굴 등의 다양한 전략적 목적에 따라 그 체계와 방법론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회사의 데이터 관리 체계를 정비하자.

자발적으로 또는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로서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해 본 사람은 인벤토리에서 요구되는 데이터 형태와 현재 기업에서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 형태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온실가스 관리가 이슈가 되기 훨씬 전부터 기업이 환경경영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늘 걸림돌이 되어 왔다. 온실가스를 포함한 환경데이터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관리 요건은 '제품 및 단위공정, 시설의 세분화'라고 생각된다. 이는 환경적 원인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개선 대안을 찾기 위함인데, 실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공장 전체 또는 라인 전체에 대한 데이터 관리 형태이거나, 제조시설과 비 제조시설에 대한 데이터가 분리되지 않아 필요한 데이터에 접근하는데 있어 한계가 많다. 또한 현장에서의 데이터 관리 목적이 원가 관리 즉 회계관리 차원이다 보니 많은 데이터는 구입량, 사용량, 발생량이 아닌 구입금액, 처리금액 단위인 경우가 많다. 금액을 기준으로 양이나 부피를 추정하는 방법도 있으나 화폐의 가치가 시간에 따라 유동적이고 금액을 산정하는 여러가지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역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하게 된다. 데이터 관리 기준이나 단위 측면의 이러한 문제 외에도 현재

목표관리제 대응을 위하여 상당수의 기업은 한번도 관리하지 않은 데이터를 향후에는 내부 관리시스템에 추가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기존의 생산성, 비용 관리에서는 전혀 필요로 하지 않던 데이터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정확성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당장에 목표관리제 대응을 위해서라도 데이터 발생 하는 시점 즉, 자재를 구매하고 설비에 투입하고, 발생량을 측정하는 시점에서 관련 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활동데이터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뿐 만 아니라 제품 탄소배출량 관리, 협력업체 평가, 탄소성과평가, 탄소 회계 등 다양한 탄소경영 활동을 지원하는데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넷째, IT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자.

470개 관리업체라면 충분히 경험했겠지만, 과거 배출량에 대한 명세서 등록과 검증, 이행계획 제출과 실적 보고 등의 활동이 매년 반복적으로 요구될 예정이다. 물론 관리 업체 지정 후 첫째와 그 다음해 규제 대응에 대한 부담은 상당부분 줄어들거나 익숙해 질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건 목표관리제에서 요구되는 명세서 및 이행계획서, 실적 보고서 등의 데이터 요구량은 결코 적지 않으며, 방대한 데이터 작업에서 발생하는 휴먼 에러로 인한 리스크, 담당자 변경에 의한 인수인계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적 이슈이며 내부 관리데이터와 정보 제출데이터에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향후 기업은 온실가스 정보를 단순한 규제대응이 아닌 전략적 차원에서 활용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온실가스 정보는 이러한 다양한 관리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형태로 취합되고 가공되고 재산성, 리포팅 될 필요가 있다. 기업 규모나 배출시설, 배출량 정도에 따라 결정될 문제임에는 틀림없으나 2014년까지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로 지정받았거나 예정인 기업이라면 IT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온실가스 관리와 전략적 활용은 기업의 자원 효율성 면에서도, 현재와 미래의 온실가스 규제에 선대응 한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한 이슈라고 여겨진다. IT시스템 도입 그 자체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 규제 변화, 바이어 요구, 내부적 요구에 따라 변화하는 시스템 유연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며, 기존의 사내 데이터 관리 시스템 (ERP, 전자결재시스템, 구매시스템)과의 호환성도 시스템 도입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이슈이다.

지금까지 기업의 효과적인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목표관리제를 시작으로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연이어 발표될 전망이고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 시장에서도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지금 우리 기업들은 발등에 떨어진 목표관리제를 앞 뒤 돌아볼 겨를도 없이 숨 가쁘게 쫓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계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나 교육, 여건을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정부 원망만 했던 적도 있으나 정부 감축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 하나하나 이행되는 지금 이 순간 더 이상 불만만 토로할 수는 없을 듯하다. 범 국가적 환경문제인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글로벌 기후변화협약과 선진국들의 의무감축, 한국을 대표하는 개도국의 자발적 동참까지 이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전세계의 관심과 행동의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눈앞에 와 있는 규제 대응 뿐 만 아니라 향후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온실가스를 관리하고 저감하고 그러한 성과를 전략적으로 기업 가치에 활용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될 시점 이라고 생각된다.

